

가동 40년 한빛원전 1호기, 수명 연장? 영구 정지?

22일 설계수명 만료...한수원, 가동 멈추고 계획예방정비 착수
노후 원전 10기 10년 연장 추진 속 원안위 심사 '초미의 관심'
“정비 진행은 수명 연장의 신호” 환경단체 20일 영구정지 선포식

안전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영광 한빛원전 1호기의 설계수명(40년) 도달이 임박하면서 향후 가동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바뀌면서 기존 폐로(廢爐) 시기가 바뀌었던데다, 새 정부의 재생 에너지 정책 기조와 맞물려 운영 종료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측도 통상적인 계획예방정비와 달리, 설계수명 만료(12월 22일)가 13일 남은 시점에서 가동을 중단한 만큼 사실상 설계수명 도달에 따른 운영 종료를 맞은 셈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한빛원자력본부는 9일 오전 11시를 기해 한빛1호기(가압경수로형, 950MW급)에 대한 제28차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하고 원자로 운영을 중지했다. 한빛1호기는 지난 1985년 12월 23일 운영허가를 받았으며, 오는 22일 설계수명 40년이 만료된다.

통상적으로 계획예방정비는 몇 개월간의 기간을 정해놓고 시행하지만, 설계수명 만료가 13일 남은 시점에서 가동을 멈춰 설계수명 도달을 고려한 가동 중단으로 볼 수 있다.

한수원은 그러나 이미 한빛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중이다.

애초 정부는 지난 2021년 1월 발표한 '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방침을 세우고 한빛원전 1호기의 경우 오는 2025년, 2호기는 이듬해인 2026년, 3호기는 2034년에 폐로 수순을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는 2023년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한빛원전 1·2·3호기를 폐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수원은 이후 '한빛원자력 1·2호기 계속운전 사업' 등을 통해 한빛·고리·월성원전 등 노후원전 10

기에 대한 수명을 10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운영변경허가서가 통과될 경우 한빛1호기는 2035년 12월까지, 한빛2호기는 2036년 9월까지 수명이 늘어났다. 인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한빛1·2호기는 사실상 영구 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지역민들과 환경단체는 아직 계속운전 결정도 나지 않았는데 정비를 진행하는 것은 한빛1호기 계속운전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현재 원안위 심사가 이뤄지는 도중인데도 대규모 정비와 검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연장을 전제로 한 투자”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돈을 쏟아부어 놓고 나중에 원안위를 압박하려는 행태”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김용국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수명이 끝났으면 그대로 멈춰야 하는 건데 정비와 검사 기간을 운영허가 기간이 사실상 끝나는 시점까지 끌고 가면서 연장을 전제로 계획예방정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 규제 기관

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수원 하부기관인지, 독립된 정부 기관인지 의심스러운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40년간 반복됐던 사고에 따른 이후 조치의 투명성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빛1호기는 올해까지 시운전시 포함 총 45건의 사고·고장이 발생한 바 있다는 점에서다. 지난 2019년에는 제어봉 조작 실패로 열출력이 제한치 5%를 넘어 18%가량까지 올라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한수원이 열출력 제한치 초과 상황에서 즉시 수동정지를 하지 않는 등 운영기술지침서를 어겼고, 제어봉 제어능 시험을 수행한 담당 차장이 관련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빛원전 격납건물의 구조적 결함도 시급히 고쳐야 할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한빛1호기와 인근 원전에서 격납건물 공극, 철근 노출, 철관 감속(두께 감소) 문제가 줄줄이 드러났는데도, 영광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해명이나 책임 있는 설명이 한 번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명연장을 전제로 한 정비와 검사를 받아들이라는 건 주민 보고 눈 감으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영광 지역 주민들은 계속운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 원안위와 한수원이 마치 다른 나라, 다른 특권 집단인 것처럼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영광군과 군의회가 나서 영광 군민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걸고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수명연장 심사를 중단하고, 원전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안전성 검증을 다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은 오는 20일 영광한빛핵발전소영구폐쇄를위한원불교대책위,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등과 함께 한빛원전 정문 앞에서 ‘한빛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을 연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40년 동안 운영된 한빛 1호기는 수명연장에 따라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며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더 확대할 수 있는데도, 나중에 원전을 다시 돌리겠다는 전제를 깔고 송전선로를 잡아두는 바람에 계통 연결을 제때 못 하는 구조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명을 연장하면 그만큼 핵폐기물이 더 쌓일 수 밖에 없다”며 “원전 영구정지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남편 간병하다 살해한 아내 감형 이유는?

항소심서 심신 미약 인정...광주고법, 징역 4년→3년 선고

남편을 간병하다 자신의 처지를 비판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1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지족동 동광산 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 고의 사고를 내고 남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3개월여 전 B씨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자 정성껏 간병을 했으나, 병세가 차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본인도 지쳐 호흡곤란, 불면증 등에 시달리자 자신의 처지를 비판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우울증 등 때문

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자녀에게 부담을 지우기 싫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간병과 보호가 필요한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A씨는 의존적 성격 특성으로 인한 정신병적 우울증을 겪고, 불면증과 결합해 환각 증상이 동반된 심신미약의 상태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씨 스스로도 반평생을 함께한 남편을 다름 아닌 자신의 손으로 살해했다는 죄책감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도서관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9일 광주시 북구 운암도서관 로비에서 직원들이 '도서관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연말 특별 프로그램으로 도서관 이용객들을 위해 나만의 소원트리 만들기 테마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경찰, 정보 유출 쿠팡 압수수색...강제 수사 착수

경찰이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대해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오전 11시께부터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내부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기록 등을 임의제출 받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비밀누설 등 혐의로 유출자를 추적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확보된 디지털 증거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자, 유출 경로 및 원인 등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의 보유 자료가 방대하고 법률 대응 인력도 상당한 만큼 이번 압수수색은 하루 이상 걸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외제차 뺑소니’ 운전자 징역 6개월 추가 구형

검찰,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검찰이 ‘외제차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6개월 확정판결을 받은 30대 고급 외제차(마세라티) 운전자에 대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추가로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9일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3시 1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지인 B, C씨에게 연락해 도피를 도울 것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지인 B씨의 벤츠 차량에 탑승해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 C씨와 함께 대적으로 도주했다. 이후 인천공항, 서울 등지를 배회하다 범행 2일여만에 서울시 강남구에

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포차를 빌려 준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으며, C씨는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공판 기일을 추후 정할 방침이다. 또 C씨에 대해서는 내년 1월 20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A씨는 도피 과정에서 지인에게 휴대전화(대포폰)를 빌려 줄 것을 요구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스스로 도피한 것은 방어권 행사”라는 판단을 내렸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한 사람의 보험비지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 댄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